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6. 23. (화)	총 3페이지

2026년 6월 23일 강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6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솜**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강원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3장
	담당자	**김현주 센터장**	연락처	**033-255-1388**

성 명 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언제까지 3명의 종사자에게 맡길 것인가!
국가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속에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더욱 은밀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SNS와 익명 채팅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접근은 물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협박, 통제 등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며 피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는 2020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더이상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며, 보호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현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취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 비해 피해자 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또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아동·청소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아웃리치 활동,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피해아동·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협박과 통제, 주변의 비난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온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지원 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해 현재의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의 통보 사건은 물론 학교 Wee 클래스, 경찰서, 청소년 유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계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발견부터 상담, 사례관리, 의료·법률 지원, 심리 정서 지원, 학업 및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태백, 정선,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 보호자 상담, 관계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피해아동·청소년 한 명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현장의 종사자들은 다수의 사례를 동시에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과 정서적 소진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이 받아야 할 지원의 질과 지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운영 체계의 불안정성이다.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독립된 시설이 아닌 위탁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착취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공모 사업과 위탁 운영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 문제이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을 현장 종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 있는 정책과 충분한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피해 규모와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독립된 전문 지원시설로 전환하라.

사업단 형태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시설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성평등가족부가 요구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확충 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피해자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상담,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온전한 회복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시설화, 예산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아동·청소년이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 6. 23.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GANGWON WOMEN'S HUMAN RIGHTS SUPPORT COMMUNITY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장